

최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를 보고 국가와 정치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마키아벨리, 루소, 피시킨과 함께 서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마키아벨리를 선택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상상적 국가보다는 역사적 실효성에 중시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처세술, 현실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의 이탈리아도 지속되는 혼란에 도시간 전쟁이 흔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미얀마 상황을 대입해 볼 때, 역사적인 경험이 현실에 유용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적 대전제가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5.16 군사 정변이 있었고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미얀마에 대입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들어서는 데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쿠데타는 시작 되었기 때문에 저는 빠른 국가 안정과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쿠데타가 끝나게 된다면 지금의 미얀마의 군사 정권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로서의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과 힘에 기반한 군주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정치체제는 불안정성을 띄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쿠데타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국가의 안정을 찾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권한대행이 국정을 잡듯이, 빠른 속도로 권력이 위임되어 국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에서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군주제의 가정에는 정치체제로써의 민주주의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루소를 선택했습니다. 루소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체제는 불평등한 체제로 점점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상태의 능력과 자질의 불평등은 인간이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는 엘리트 계층을 대변하게 되며 인간 소외가 극단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기 입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 법을 준수, 모두가 참여하는 의

사형성과정 수립, 그 과정 속에서 공공선에 대한 인식과 공공정신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민주적 공화주의의 기초를 제시하며 현대의 우리나라의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슷합니다. 저는 미얀마의 상황에 기초할 때 이런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로 일어난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로 인한 수많은 소외받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 성장이나 시장의 기능을 강조 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국정운영에 ‘사람’을 우선적으로 두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불평등이 개선되며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국가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합니다. 불평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IMF와 OECD의 논의내용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는 루소의 주장과 같이, 이 사회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포용적 발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발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세번째로, 피시킨을 선택했습니다. 피시킨은 토의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토의민주주의는 공적 사안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열린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정당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호존중, 공개성, 진실성 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사안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히고 숙고된 견해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적으로도 집합적으로도 질적으로 향상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비판과 한계점을 드러내지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미얀마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확실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적 사안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겠지만, 한국의 원전 공론화 위원회라는 사례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로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체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론을 내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두 주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제는 애초에 토의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었다더라도 충분히 논란되고 오래 보류되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숙고/토의 방식으로 결과는 내지 못하더라도 점차 합의점/중립점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한다면 어떠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토의민주주의에 동의합니다.